

정보 무늬(QR코드) 이용 시, 음성으로 보도자료를
확인할 수 있는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


안드로이드



아이폰



국민권익위원회

Anti-Corruption & Civil Rights Commission

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4. 24.(금) 11:30 배포 : 2025. 4. 24.(금) 08:30

“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, 적극 도와야”... ‘공동 창고부지’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

-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,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공급을 요청하며 집단민원 제기
- 국민권익위, 오늘(24일)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조정안 확정

□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*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정일연, 이하 국민권익위)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.

* 친수구역 : 국가하천 정비로 조성된 주변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주거, 상업, 레저, 문화 등 수변공간으로 활용하는 구역을 뜻함

□ 국민권익위는 오늘(24일)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, 국가유산청,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.

□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

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,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.

- 그 후,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하였다.

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, ▲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 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% 수준,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.9㎡(13평) 수준으로 제공하고, ▲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「자연유산법」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▲신청인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“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.”라며, “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수자원민원과	책임자	과 장	이항노	(044-200-7481)
		담당자	사무관	류지호	(044-200-7494)



#국민권익위 #고충민원 #집단민원 #현장조정회의 #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#어민 #창고부지 #한국수자원공사 #국가유산청 #부산광역시강서구 #자연유산법 #공익사업